

□ 지난 1년은 한마디로 한국 과학기술정책 50년사에서 가장 형편없는 콘텐츠와 가장 형편없는 실행력을 보여준 1년이었다고 평가한다.

- 대통령의 창조경제의 정의는 ‘개인의 상상력과 창의력 그리고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운용되는 경제체계’ 로 명확하다.

이에 비춰 볼때 1) 개인의 상상력과 창의력 2) 과학기술 3) ICT 중 어느 하나 버젓하게 나온 게 없다. 온갖 세미나, 포럼, 토론회, 설명회만 난무했다. 우리나라는 MOU대국에 세미나대국이 첨가됐다. 유일하게 대통령이 직접 챙긴 창조경제타운만 그럭저럭 가동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배경에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주변 관료들의 무능함이 있다. 이 무능함은 창조경제 정책부재를 낳고, 정부를 산만하게 하고 정권의 추진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미래부는 얼마나 많은 정책 아이디어를 내놨는데 무슨 소리냐고 필적뫼겠지만 부지런하다는 평을 들을 수는 있겠으나 정책다운 정책은 찾아볼 수가 없다. (무능력이란 말은 미래부가 너무 작은 것들을 너무 부지런히 면피 하듯이 내놓고 있다는 뜻이다)

미래부의 최대 역점 사업중의 하나인 ‘미래 성장동력 9+4’와 산업부가 내놓은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비교해 보라. 누가 베꼈는가도 문제지만 두 부서의 정책 혼선과 희석화가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많다.

게다가 과학기술과 ICT의 두 진영은 결합 사례 하나도 못 내놓고 서로 케미스트리가 안 맞는다고 등을 돌리고 있다.

□ 창조경제의 추진의지를 담보하고 있는 출연연구기관을 보자. 얼마나 피폐화하고 있는지.

-4대짐이 있다. 기재부의 출연금 삭감, 벤처창업을 지원하는 공동기술지주회사 창설 자금 분담금, 중소기업지원 확대 비용, 여기에 최근엔 ‘출연연 고유임무 재정립’이란 과제도 떨어졌다. 이 과제는 관료주의의 극치라 할 수 있다. 모든 공공기관의 얘기는 하지만 경조사비, 격려금 규정 강화 등 자존심 상하게 하는 방침들이 수없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정상을 비정상화하는 역조치들이다.

- 출연연의 문제도 있다. 정책과 과제를 선점하는 자세가 안보인다. 관료들 손에 모든 걸 맡기고 뒤에서 투정만 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심하게 말하면 비굴해 보인다. 사무관에도 쫄쫄매고, 과장은 기관장과 동급이다. 창조경제는 톱다운이 아니다. 그렇다고 국민이 아이디어 내는가. 책임있는 전문가 집단에서 나와야지. 기업은 창조안하면 죽으니까 스스로 알아서 한다. 스케일이 크게 놀자. 과제가 복잡하고 글로벌해질수록 출연연의 역할은 더 커진다. 미래를 책임질 집단지성이 앞가림마저 남에게 맡기는 집단치매에 빠지지 않아

야 할 것이다.

□ 국민적 논의라면 좀 거창하겠지만 이런 여론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자. 국회 미방위가 과학기술관련법을 하나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해서 과학계가 난리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 미래부만 난리 아닌가. 예컨대 출연연 이사회를 합치는 게 그토록 중대한 일인가. 과거에는 왜 같랐고, 다시 줄였고 했는가. 그래서 출연연 거버넌스가 아주 좋아졌는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보자. 명명부터 뒤틀린 것이라는 걸 모두가 알 것이다. 아이디어 낸 사람과 그것을 고친 전 대통령(비즈니스)과 거기에 손갈을 엮은 국회의원(벨트)의 3부작이다. 이 벨트의 핵심이 IBS라 해서 대덕에 유치하는 것까지는 좋았을지 모르나, 대한민국 기초연구의 미래를 이끌고 국제적 위상을 드높일 이 기관의 구성과 그 첫 책임자의 무책임한 사퇴가 과학계는 물론 그 바깥 사람들에게 미칠 파장을 생각해 봐야 한다. 점차 확대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IBS 효용론의 침식현상을 막을 대책이 있는지 꼼꼼히 생각해 봐야 한다.

더 멀리 보면 출연연의 국립화와 민영화를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꼭 국가가 할 것이라면 국립기관으로 하여 막강하게 지원하며 책임을 지우자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곳은 민간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기능 재정립은 적어도 이런 차원이어야 한다. 마구 꺼낼 말이 아니다. 어찌됐던 어정정한 출연연구기관-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고 쓰는- 이름을 바꿀 때는 된 것 같다.

□ 마지막으로 시니컬한 결론을 내본다.

큰 기회와 큰 위기가 앞에 놓여있다. 큰 기회는 과학기술정책과 그것을 다루는 정부 및 연구기관들이 최고로 약체화 되어 있어 그 체제를 수선하는데 필요한 동력을 오히려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큰 위기는 여론을 끌고 정치를 움직이는 언론의 관심이 점점 멀어져간다는 점이다. 오늘 이 자리가 그냥 밥 한끼 먹고 떠들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꺼내놓고 진정한 고민을 하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출연연구기관이 쫓대 있고, 스케일 크게, 선도적으로 나가자.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 그리고 경제혁신3개년계획으로 이어지는 박대통령의 발빠른 정책혁신이 조기에 결실을 거두도록 ‘과학기술 가속화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때다.

2013.3. 27 광 재원 한양대 석좌교수